

현장과 시각

목포항 이양 소동과 전남도



채희중

사회2부 차장

정부가 최근 52개 무역항 및 연안항 중 6개항만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지정하는 대신 나머지 22개 무역항·24개 연안항을 지자체에 이양키로 한데 대해 연안지역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의 대표 항인 목포·동해항이, 충남도는 대산항이 국가 주요 항만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대표 항이 국가 주요 항만에서 제외될 경우, 각종 개발 계획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자체의 예산 만으로는 항만 관리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달랐다. 목포항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찬성한 것이다. 전남도는 목포항을 비롯한 관내 항만을 관리하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9개 항만 관리)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5개 항만)의 모든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개월 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해양항만청의 지자체 이양에 찬성했음은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기능, 물류 기능 등을 도시계획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도시발전과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 관리가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달려오는 인력만 320명에 관련 예산이 동원되기 때문에 도로서는 손해를 볼 게 전혀 없다는 계산이었다.

과연 그럴까? 실은 전남도가 조직확대만을 노리다가 감당 못할 주장을 했다는 게 곧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달 21일 6개 항을 제외한 46개항의 관리를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히자, 다음날 목포시와 지역 상공회는 일제히 지자체 이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진입항로 준설 210억원, 준설투기장 조성 300억원, 목포신항 안벽 추가건설에 약 2천500억원 등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천억원 정도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건 목포항의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전남도에 정부방침 수정에 나서달라며 매달렸다.

결국 전남도는 목포시의 요청을 받은 뒤 당초의 입장을 뒤집고 정부에 목포를 주요 항만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목포시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쫓아가 통사정 한 끝에 목포항의 국가 주요 항만 추가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번 소동은 전남도가 조직 확장 그에 따른 예산 증대라는 조그마한 이익에 혹해 목포항의 미래를 간과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라북도는 1개월 전 정부의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이양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다. /chaekw@kwangju.co.kr

좌초 위기 맞은 DDA<도하개발 어젠다 협상>

한국 통상정책 FTA로 선회

주도국 정치 일정 급박...협상 재개 쉽지 않을 듯

7년간의 대장정 끝에 타협 가능성이 점쳐졌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DDA 전체가 아니라 7대 무역국 회의가 결렬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가 DDA 협상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DDA 전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각료회의가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 상황이 협상 시작 나흘만인 지난 25일 핵심 쟁점인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주요국 대표들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는 낙관으로 반전했다.

그러나 세부원칙 합의시 남았던 잔여 쟁점들, 특히 농업관련 부분을 둘러싼 G7(7대 무역국)의 대립이 끝내 전체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G7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브라질이다.

우선 개도국이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SM)를 발동하려면 수입물량 증가폭이 이전 3년간 평균물량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미국 등 선진국 주장과 이를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인도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DDA의 운명을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이번 협상이 주요국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한 '최후의 대타협 시도' 성격이 강했다는 점과 협상의 핵심인 G7의 절충실패 총격을 고려하면 협상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DDA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이번 협상이 중단될 경우 각국의 정치 일정상 뚜렷한 협상 추동력을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에 DDA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반대

자인 인도는 내년 5월 이전에 총선이 있을 전망이다. EU는 내년 9월이면 집행부가 전면 개편된다.

한국은 그간 대외통상에서 DDA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FTA(자유무역협정)로 상징되는 양자주의 전략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일단 DDA가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 쪽으로 통상정책의 추가 기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DDA 협상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G7과 같은 핵심 당사국도 아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네바 각료회담의 합의안 처리방향을 놓고 WTO 회원국들이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EU와 인도, 캐나다와 FTA 타결시도에 나설 계획이다. 무역 시장을 확대하고 통상을 다변화하기 위해 FTA로 국제 통상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DDA가 좌초할 경우 우리의 공산품 시장 확대나 주요 무역시장 접근 개선에는 차질이 예상되지만 농업은 개방 '공포'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北, 핵검증 샘플 채취 불허 美에 통보”

美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북한은 핵신고 검증을 위한 영변 핵시설의 방문을 허용하겠지만 샘플 채취는 불가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의 정통한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다른 영변시설에서 핵샘플 채취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당초 의사를 거둬들였다"면서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 때 이 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시 행정부 내에선 내달 11일까지 검증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아도 과연 북한을 예정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전문가는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신들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보다 실제로 더 많이 추출한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나 "핵샘플 채취를

허용하는 대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외교협회(CFR)의 캐리 새모어 부회장은 분석했다.

그는 북시 행정부가 다음달 11일까지 검증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아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할 것인지 "단언하기 힘들다"면서 "만일 검증계획서 없이 북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면 의회 등이 강력 비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전·현직 재무장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월가 및 노동계 인사들과 잇단 접촉을 갖고 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대선 경제전략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과 40여분 단독 면담했다.

오바마는 이날 또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도 전화 회담했다. 오바마가 버냉키 및 폴슨과 각각 단독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는 전날 재무장관 출신인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및

폴 볼커 FRB 전 의장, 그리고 투자자 워런 버핏과도 '경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 인사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인사는 "재정적자 심화 등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 '경제 되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건의됐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경우 헬스케어 포함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쪽에 정책을 초점이 맞춰왔지만 미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두 진영 모두가 정책을 손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도서 또 무더기 폭탄 발견...테러공포 확산

최근 두건의 연쇄 폭탄테러로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에서 또 다시 도심에 무더기로 작렬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 항구도시인 수라트 도심에서 29일 저녁(현지시간) 18개의 소형 폭발물이 추가로 발견돼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폭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상(神像) 주위와 상점 앞 도로, 가로수 가지 등에 매설돼 있었다.

이들 폭발물들은 지난 26~27일 발생한 하이데라바드와 아메다바드 연쇄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이지만 타이머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수라트 시내에서는 이날 12개 가량

의 폭탄을 더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실려 있는 2대의 승용차도 발견됐고, 수라트 지역 언론사에는 최근 연쇄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던 '인도 무자헤다' 명의의 이메일도 발송됐다.

한편 지난 26일과 인도의 '실리코밸리'로 불리는 하이데라바드에서는 8개의 폭탄이 터졌고 이어 27일에는 구자라트주 최대도시인 아메다바드에서는 16개의 폭탄이 잇따라 터져 54명이 죽고 16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미요세미티 산불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 소방대원들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지켜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9일 '텔레그래프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이 계속 번져 지금까지 2만9천 600 에이커의 산림이 타고 주택 25채가 파괴됐으며, 300여 채의 주민의 소개된 데 이어 4천여 채의 주택이 추가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선 경제전략 '손질'

버냉키·폴슨·버핏 잇따라 면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전·현직 재무장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월가 및 노동계 인사들과 잇단 접촉을 갖고 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대선 경제전략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과 40여분 단독 면담했다. 오바마는 이날 또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도 전화 회담했다. 오바마가 버냉키 및 폴슨과 각각 단독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는 전날 재무장관 출신인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및

폴 볼커 FRB 전 의장, 그리고 투자자 워런 버핏과도 '경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 인사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인사는 "재정적자 심화 등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 '경제 되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건의됐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경우 헬스케어 포함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쪽에 정책을 초점이 맞춰왔지만 미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두 진영 모두가 정책을 손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Mountain Hiking Guide) with various notices and schedules.

한문지도시지적 연수생모집 (Hanmun지도시지적 연수생모집) advertisement for a training course.

한문지도시지적 연수생모집 (Hanmun지도시지적 연수생모집) advertisement for a training course.

한문지도시지적 연수생모집 (Hanmun지도시지적 연수생모집) advertisement for a training course.